

# 새 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부의 정책적 배려·리더십 매우 중요, 모두가 힘 합쳐야 발전  
‘시군 유통회사 설립’ 신중·점진적, ‘핵심인력 육성·유통CEO 영입’ 시급

**지**금 우리의 농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곡물자급도가 낮아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사료곡물 포함)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애그플레이션의 여파로 곡물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축산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다행인 것은 대통령이 직접 한우농가를 방문하고 해외 조사료개발을 언급할 정도로 농업의 위기상황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은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임기 중 한국농업을 회생시켜놓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업발전의 사명은 농업분야에 관계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고 우리가 힘을 합쳐 이루어 나가야 한다.

## 위기관리 시스템 강화·정신력 회복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농업이 처해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농업분야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애그플레이션은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몇 년 전부터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나 한미 FTA 문제도 정확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예정된 수순을 밟아 왔다. 물론 조류독감의 발생은 돌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농업분야를 둘러싼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나 사건은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재원 그리고 노력이 수반된다. 예방시스템을 잘 갖추고 미리 미리 대처해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지만 농협(全農)이 미국 등 주요 곡물 생산 국가에 컨트리 엘리베이터를 확보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위험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 노력의 필요성이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놓고 벌이고 있는 많은 논란들을 보면 아쉬움이 많다. 식품의 안전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안전성 분야에 정통한 학자그룹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미칠만한 허점이 있다면 그 보완책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위험성이 있지만 그 개연성(확률적 의미에서)이 매우 낮다면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솔직하게 알려주어야 소모적 국론분열 없이 정책도 올바르게 가고 소비자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식품도 100% 안전할 수는 없고 소비자도 다 알고 있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위협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소비자는 불안하고 여러 가지 비전문가들의 부정확한 정보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무질서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될 정도로 자유분방한 사회에 살고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구성원들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를 얻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사회갈등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이를 성숙한 자세로 극복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풀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둘째, 우리 민족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의 회복이다. 지난해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5천년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지구촌의 많은 민족들과 겨루어 당당히 선진국의 진입을 실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도 중요한 한 산업으로서 이 대열에 동참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곡물파동과 축산위기의 와중에 있고, DDA 및 FTA의 진행으로 시장개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결코 농업의 주변상황이 녹록치 않고, 쉽

게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물질 추가, 정책지원 추가」이전에,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긴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힘으로 잘 해결해 왔다. 그 역사성과 저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정신력이 많이 약해졌다. 옛말에 백리를 가는 사람에게는 구십리가 절반이라고 했다. 선진국 진입이 코앞이라고 하여 정신이 해이해지거나,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결속력이 약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만 보자. 우리의 농정이 과연 좋은 제도를 못 만들어서 제대로 안 되었는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되었는가? 아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돈을 수없이 쏟아 붓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무능이 아니라 정신적 해이에 있는 것이다. 지혜롭고 순박한 우리 민족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활이 좀 윤택해졌다고 하여, 정신이 크게 흐트러졌다. 정책은 공평무사하고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투입되는 자금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하는데, 과연 그랬으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매사에 농정을 불신하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지는 않은가? 글로벌시대의 도래를 외면하고 나의 이익만을 고집하며 집안의 쪽박을 깨지는 않았는가? 협동과 단결은 뒷전이고 내 몫



이병오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챙기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정신의 토양이 척박해지면 아무리 좋은 제도나 돈이 투입되어도 효과가 제대로 날 리가 없다. 먼저 우리는 이 정신을 회복하여야 한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농업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실을 딸 수 있다. 큰돈은 못 벌어도 내 땀이 가치 있고 자랑스럽다. 국내외 여건이 어렵더라도 힘을 합치면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정책의 개발이나 추진은 그 다음 일이다.

**농업 연계된 식품산업 육성·유통회사 설립 신중**

셋째, 식품산업을 육성하되 농업과 잘 연계된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농업의 영역을 식품산업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업체들은 농촌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력이나 마케팅 능력이 취약하다. 이를 어떻게 규모와 경쟁력을 키워 육성하느냐가 주요 과제이다.

한편 대형 식품기업이나 외식업체들은 수입 농산물 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기조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외국업체들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이들에게 비싼 국산원료만을 쓰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물론 식품업체에게는 우선 경제적 매력이 있어야 하나, 대형 식품업체 같으면 마음먹기에 따라 국산농산물을 사용한 특색 있는 식품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지금 밀가루 값이 폭등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쌀을 이용한 식품의 개발은 회사나 우리 농업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다.

중소규모 식품업체도 지역의 전통적 기술을 잘 살려 차별화하고, 이를 브랜드화 하면 경쟁

력을 갖출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인정신으로 무장하여 계속 기술개발에 힘쓰고,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렇게 지역별로 특화된 소규모 식품산업들을 클러스터 형태로 묶어 공통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정부의 농정이 내걸고 있는 ‘돈 버는 농어업, 살 맛 나는 농어촌 달성’이라는 슬로건은 웬지 신바람이 난다. ‘농수산식품을 생산자 중심의 공급방식에서 유통법인이 생산자를 이끄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어업을 2, 3차 산업과 융합되도록 한다.’는 방침에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현대의 푸드시스템이 소비자에게 무게중심이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유통조직을 육성하여 농업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아직 우리나라 농업의 주산지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고, 전국단위 품목별 생산자 조직도 자생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소규모 위탁 영농회사나 농업회사 법인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부실이 널려 있는 상태이다. 정부의 보조금을 바라고 급조된 조직은 애초에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생산현장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자생력을 갖춘 생산자조직이 계열화 등의 형태로 가공과 판매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시군단위로 1,000억원이상 규모의 유통회사를 설립한다고 한다. 대형 프로젝트는 치밀하게 기획되고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면 대형사고

로 이어질 수 있다. 농업을 알면서 대형 유통회사를 효율적으로 이끌만한 CEO 인재풀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그 유통회사가 원료를 조달하는 농가와 상품을 구매해 가는 소매점들을 아우르는 조직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렇게 전후방으로 함께 참여하는 농가나 소매점들은 '계약'이라는 형태로 유통회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텐데, 여기에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는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익숙하지도 않으며 경험이 부족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매업계는 대형마트로 불리는 할인점들이 장악하고 있다.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한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공식대로 끌고 가려 하지 말고 분위기를 성숙시키면서, 무엇보다도 자생력을 갖춘 업체들이 스스로 커나가도록 제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핵심인력 육성·기초부분 지속 투자

다섯째, 젊고 능력 있는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유능한 유통 CEO를 농업부문에 영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결국 모든 일은 담당주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지역리더 또는 조직리더는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또 시군마다 젊은 농업인들이 들어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농업뉴타운을 건설한다는 아이디어도 신선한 충격을 준다. 고품화된 농촌에 새바람을 불어 넣으려면 특단의 조치(big push)가 많이 필요하다.

지금 지자체, 농협, 지도기관, 지방대학에서 산발적이고 확립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 및 인력양성 시스템은 대폭 손질을 하여야 한다.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하고, 분야와 등급을 나누어 체계화하여야 한다. 또 전국 농학계 대학의 인재들이 농업 현장이나 관련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으로 쓰여지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일부 기초연구분야나 대학원 진학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농산업분야에 취업하여, 자기의 전공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농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농학계대학의 교육분야, 학생정원, 커리큘럼은 이러한 농산업분야의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교수들은 방학은 물론 평소에도 농산업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 보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과 농산업간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여, 농산업분야의 유능한 CEO들이 대학에 와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들이 농가나 농기업에 컨설팅을 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여섯째,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농업의 본질적이고 기초가 되는 부분은 인내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차근차근 구축해나가야 한다. 자원순환형 농업(지속가능한 농업, 친환경농업) 체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초부문은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에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은 외면하게 된다. 이런 부문에 국가가 과감하게 투자하여 외부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초기 시설투자가 많이 소요되나 공익성이 강하고 수익성이 낮은 기간시설들(LPC, RPC, APC 등)은 '공공소유 민간경영'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나 지자체 재원으로 건설하여 소유권은 유지하되, 이를 농·축협 등 경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Y